

警察「신뢰도」司法府 추월

- “자질부족으로 搜查權 줄 수 없다”는 주장은 語不成說 -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찰의 대국민 신뢰도나 만족도, 청렴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이제 「경찰의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경찰수사권은 시기상조이며, 수사권을 줄 경우 국민권익이 침해된다」는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최근 동아일보 부설 「21세기 평화재단·평화연구소」가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경찰 신뢰도가 지난 10년 전에 비해 크게 높아져 사법부와 군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 80여개 국가가 동일한 설문문항을 사용해 5년 주기로 실시해 온 「세계 가치관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법부와 군대, 노동조합보다 못 믿을 곳이었으나, 이제는 이들보다도 국민신뢰도가 훨씬 높은 조직으로 순위가 급상승했다(한

경운동단체) 인권·자선단체) 여성운동단체) TV) 신문) 시민단체) 경찰) 군대) 사법부) 대기업) 교회) 행정부) 노조) 전교조) 국회) 정당 순임)

또한 경찰은 지난해 4월 「중앙일보」와 「동아시아 연구원 시민정치 패널」이 공동으로 국내 23개 주요조직에 대해 실시한 영향력 및 신뢰도 조사에서 점수가 높은

국광복과 더불어 탄생해 그 슬한 격동의 현대사와 영욕을 함께하며 건국·구국·호국의 경찰로서, 그리고 봉사경찰로서 묵묵히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해와 이제는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세계 속의 경찰로堂堂히 성장한 것이다.

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이 전국의 2,472명을 대상으로한 자체조사에서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69%를 차지했고, 동년 8월 「월드리서치」에서

동아일보 부설연구소 조사,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만족도·청렴도」 크게 높아져

선두그룹으로 나타났고, 동년 5월 「한국경제신문」에서 실시한 「국가만족도」에서도 경찰의 치안·방법 분야가 다른 분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년 6월 「투명사회 실천협의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서도 정부기관 중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제 창경 61주년을 맞았다. 조

더욱이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 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서비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를 차지한 것은 국민들이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원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관련 「인권의식의 급격한 성장과 공정성·전문성·책임성이 요구되는 수사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획기적 인권프로그람의 일환으로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搜查警察制」, 「書面搜查指揮制」 등을 시행하고, 외부 통제 장치인 「시민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신뢰받는 수사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수사시스템의 정착,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정 투명한 수사실현, 전문성 제고를 통한 책임수사구현, 수사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수사역량 확대와 등 수사경찰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21C 치안환경에 적합한 최상의 선진수사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주장은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동일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이중으로 조사함에 따라 초래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 195조와 제 196조를 합리적으로 개정, 경찰에게 법상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檢·警간의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경찰의 독자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의원(한나라당)이 오히려 검찰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檢·警 수사권 조정, 열정적으로 추진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순조롭게 마무리 됨에 따라, 이 내정자는 국회 본회의 보고, 대통령 임명 등 정식절차를 거쳐 조만간 경찰청장으로서 취임식을 갖고 조직안정과 경찰 당면현안 해결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시스템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며, 97%의 사건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뒷받침할 일 반적 규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도한 지휘와 상명하복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하고 「이를 열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내정자는 평화시위 정착방안으로서 「불법시위 및 집회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장비나 제도적 개선책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시위진입 경찰의 실명 명찰 착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하위직 직원들의 염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어느때 보다 비장한 모습을 보인 이 내정자의 각오는 남달라 보였는데, 이는 그간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

기록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여의도 농민사태와 관련 중도사퇴했고, 최광식 경찰청 차장마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넣어서 벌어진 경찰 초유의 수뇌부 공백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 조직안정을 꾀했고, 경찰수사권 문제 등 당면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모두 이 내정자의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내정자는 지난 1월 26일 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직후, 경기경찰청에서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서울서대문구 경찰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는데 이어 경찰청 총경급 이상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능별 현안 업무의 빈틈없는 수행과 조직기강 확립 등 민생치안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으로서 본격적인 조직 추스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헤쳐 나가야 할 현안은 당장 흔들린 경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고 서울경찰청장 등 공직인 고위직 인사를 단행해 새 지휘부를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리실에서 막바지 조율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안팎의 힘을 다시 집중해 경찰의 최대 숙원을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대책, 하위직 경찰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근속승진을 규정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 작업 등 중요한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만 한다.

한편 이 내정자가 경찰청장에 정식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13일쯤 이후에는 총경급 이상 경찰 인사가 빠르게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황호항 前 사무총장 장학금 1억원 기탁

2002년 5천만원에 이어, 5천만원 추가 전달

황호항 前 경우회 사무총장이 경우 장학금 5천만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황 前 총장은 지난 1월 23일 구홍일 경우회장에게 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하고, 「경우 자녀들에게 면학의 꿈을 키워주는데 사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前 총장은 사무총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2년 3월에 5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5천만원을 내려 농음으로서 총 1억원의 기금을 기탁한 것이다.

평소 경우장학회 활성화에 남다른 열성을 보여 왔던 그는 「내 조그마한 성의가 경우자녀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과, 지난 2002년 5천만원 기탁이 힘이 되어 기금 10억원 목표를 달성했듯이 이번 5천만원 기탁도 새로운 불씨가 되어 20억원 모으기 운동으로 변저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소신을 밝혔다.

「경우회 재직시절 장학회 상임이사를 맡게 된 것을 계기로 후진양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는 지금

도 경우 장학회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기금 모으기와 장학회 운영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씨 종친 회에도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것을 비롯, 지난 2004년부터는 국민의 통일열의를 담고 있는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도 성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 온 그는 현직시절에도 매사에 최

선을 다하는 삶으로 일관해 의정부와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을 거쳐 해양경찰청 경무부장을 끝으로 지난 94년 6월 현직에서 물러났고, 경찰발전을 위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국경찰발전 연구회」를 설립, 운영하며 현직경찰을 측면지원하고 있는 영원한 경찰인이다.

(2면으로 계속)



황호항 前 사무총장이 구홍일 경우회장에게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쇠파이프, 죽창」을 버리고 「평화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무장한 폭력시위대를 방패로만 막는 경찰은 지구상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公權力이 무너지면 國家紀綱이 무너지고 亡國으로 가게 된다. -

1. 공권력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 민주국가의 경찰권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공권력이며, 정통성이 확립된 민주국가에서 폭력시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 무장한 폭력시위대를 방패만 들고 어떻게 막으라는 것입니까?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보호를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의 강경진압만을 탓할 수 있습니까? 불법 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사법기관의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 평화적 시위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시위대의 주장을 정부와 언론, 모든 국민들이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 합니다.

2. 아직도 폭력시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 「홍콩 경찰은 시위대의 발길질에도 놀라더라. 한국도 비폭력의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한 국회의원의 말을 듣고 자괴감을 느낀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 과잉진압 문제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동대원 명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쇠파이프와

복면을 벗어 던지고堂堂하게 준법 평화시위로 전환해야 합니다.

- 준법 평화시위는 적극 보호하되, 『경찰통제선』(폴리스 라인)을 넘기만 하면 가차 없는 강경진압과 엄한 처벌로 법질서를 유지하는 선진국 경찰의 준엄한 모습을 보고, 우리 경찰도 시위대도 배우고 반성하여야 합니다.

3. 전·의경은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 전·의경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아堂堂하게 국법질서를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들이며, 이들을 범법 집단처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 「쇠파이프와 갈라진 죽창으로 눈을 공격해오는 술 취한 시위대가 소름끼친다.」는 실명한 전경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 경찰에게만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으로 책임을 묻게 하고 과격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인권위원회」의 태도는 선량한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